

2025년 청년·대학(원)생 법·정치·선거, 의식조사 발표

조국과 민족의 희망인 청년대학생들의 세상보는 눈 - 공동체의식

< 총1,663명, 평균연령 23.52세 -- 표본오차는 95%신뢰수준에 ± 2.43%P>

- 선거나 정치 여론조사-신뢰하지 않는다(전혀 포함) <59.83%> // 신뢰한다(매우 포함) <37.40%>
- 21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 93.50% <반드시 투표 65.90%, 되도록 투표 27.60%>
-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<동의 82.56%, 부동의 15.39%>
-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국방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 <부동의 82.20%, 동의 15.27%>

-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자질 ‘경제 전문성’ (32.53%), ‘외교·안보 역량’ (22.37%) ‘국민과의 소통능력’ (18.04%), ‘청렴성과 도덕성’ (14.49%)
- 후보자 선택 기준 ‘정책·공약’ (42.69%), ‘후보자 개인의 능력·도덕성’ (29.46%)
- 유권무죄, 무권유죄 현상 여전하다 <동의 86.77%, 부동의 10.70%>
- 우리 법원(사법부)은 불공정한 편이다 <24.42% (매우포함)>
<< ‘공정한 편이다’ 35.36% (매우포함), ‘보통이다’ 37.94%>>
- 정치에 대한 성향 <보수적인 편 41.73%(다소 포함), 진보적인 편 45.04%(다소 포함)>
-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폐지해야 한다 <동의 62.12%, 부동의 35.06%>
- 이번 6.3 선거는 체제전쟁이 될 것이다 <동의 50.75%, 부동의 46.00%>
- 선거재판 법정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<동의 86.65%, 부동의 10.82%>
- 헌법개정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(개헌)은 안된다 <동의 90.14%, 부동의 8.00%>
- 외국인 투표권은 상호주의에 의해 제한해야 하다 <동의 77.93%, 부동의 19.54%>
- 외국인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야 한다 <동의 79.92%, 부동의 17.56%>
- 다수당이 단독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
<<78.65%(매우포함), ‘매우 바람직하지 않다’ 도 29.22%, 바람직하다 15.03% (매우포함)>>

- 정치에 대한 관심<<관심 60.25%(매우 9.14% 포함), 무관심 37.28%(전혀 5.47%포함)>>
- 법을 안 지키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직군<<정치인 57.43%, 기업인 19.66% 순>>
- 악법이라도 법개정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<<동의 69.93%, 부동의 27.90% >>
- 북한의 도발행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<<동의 63.32%, 부동의 33.91%>>
- 외국인에 건강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지급 반대한다<<동의 56.83%, 부동의 40.47%>>
- 외국인의 선거개입 의혹에 공감한다<<동의 42.87%, 부동의 53.70%>>
- 사전투표에 부정선거 가능 주장<<가능성 있다 44.98%, 전혀 사실 아니다 47.68%>>
- 정부가 결혼·출산장려에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이 늘 것이다<<동의 18.64%, 부동의 79.25%>>

1. 입법/사법감시, 법률전문단체인 35년 전통의 **법률소비자연맹/대학생법정치봉사단**(총재 김대인)은 매년 **법의 날**(4.25)과 **유권자의 날**(5.10)을 기해 청년·대학생 법정치의식을 조사해왔으며, 금년도는 **6·3 제21대 대통령 선거**에 즈음해 법률소비자연맹의 청년 대학생자원봉사자 171명을 통해 전국의 160여개(샌디아고대, 시드니대, 프랑스파리2대학교 등 해외대학교 포함) 대학교 청년·대학생 및 대학원생 등 **1,663명**을 대상(응답자의 **평균연령 23.52세**)으로 실시한 48개 항목의 법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 <표본오차는 95%신뢰수준에 $\pm 2.43\%P$ >
2. 이번 조사를 주관한 **김대인 법률연맹 총재**는 “법과 정치의 목적은 평화와 번영, 즉 국리민복(國利民福)이며,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이다. 민주주의를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준법을 생활화하고,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, **자유민주적 헌법이념과 실질적 법치**가 실현되도록 **주권시민들이** 부정선거감시 등 **주인노릇**에 충실해야 한다”고 역설했다.

I. 조사배경 · 개요 |

1. 입법/사법감시, 법률전문단체인 35년 전통의 **법률소비자연맹/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**(총재 김대인)은 매년 법의 날(4.25)과 유권자의 날(5.10)을 기해 대학생 법정치 의식조사를 해왔으며, 2025년도에는 6.3 대통령 선거에 즈음 법률연맹의 대학생법정치봉사단원 **171명이 전국의 대학교 대학(원)생 총 1,663명**을 대상(**평균연령 23.52세**)으로 2025년 4월 30일(수)부터 5월 11일(일)까지

12일 동안 48개 문항의 범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.

2. 조사 개요

- 1) 조사기관 : 법률소비자연맹/한국대학생(법정치)봉사단 (총재 김대인)
- 2) 조사방법 : 48개 문항의 설문으로 자원봉사대학생들(168명)에 의한 조사
- 3) 조사대상 : 남녀 청년·대학(원)생 **1,663명**

〈표본오차는 95%신뢰수준에 $\pm 2.43\%P$ 〉

가) 성별 응답자 현황

구 분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남 자	648	38.97%
여 자	982	59.05%
무응답	33	1.98%
계	1663	100%

나) 학력별 응답자 현황

구 분	응답인원(명)	응답비율(%)
재 학	1038	62.42%
휴 학	218	13.11%
졸 업	276	16.60%
대학원 재학	42	2.54%
기타 및 무응답	89	5.35%
계	1663	100%

다) 응답자 평균연령 : 23.52세

라) 응답자 출신대(응답인원) : 고려대학교(165), 연세대학교(144), 성균관대학교(141), 서울대학교(124), 중앙대학교(113), 경희대학교(72), 부산대학교(64), 동국대학교(48), 서강대학교(42), 국민대학교(40), 한국외국어대학교(36), 이화여자대학교(33), 한양대학교(30), 건국대학교(26), 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(20), 숙명여자대학교(20), 홍익대학교(17), 부경대학교(17), 서울시립대학교(17), 용인대학교(16), 경북대학교(15), 인천대학교(14), 서울여자대학교(13), 인하대학교(13), 전남대학교(12), 전북대학교(11), 포항공과대학교(10) 등 160여개 대학

※ 48개 항의 상세한 조사결과는

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(www.goodlaw.org) 공지사항 참조 끝.

법률연맹 총본부 / 한국대학생(법정치)봉사단

전화. 02) 523-8760~7, goodlaw@goodlaw.org <문의 : 홍 금 애 실장 / 윤 소 라 부장>

2025년 청년·대학(원)생 법·정치·선거의식 조사결과 '한눈에 요약보기'

가. 법과 법준수에 대한 인식

- ▣ 법을 안 지키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직군 <<정치인 57.43%, 기업인 19.66% 순>>
- ▣ 악법이라도 법개정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 <<동의 69.93%, 부동의 27.90% >>
- ▣ 10억을 준다면,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 <<동의 41.85%, 부동의 56.10%>>

나. 주요 이슈 재판·헌법재판 관련

- ▣ 현재의 대통령 탄핵재판 절차는 공정했다 <<예 82.50%, 아니오 14.37%>>
- ▣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결정은 정당했다 <<예 49.91%, 아니오 46.60%>>
- ▣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재판은 공정했다 <<예 47.87%, 아니오 47.75%>>

다. 검찰 개혁, 사법개혁 관련

- ▣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 <<예 43.96%, 아니오 52.86%>>
- ▣ 지방법원장의 직선제(주민이 직접선출) 도입해야 한다 <<예 42.93%, 아니오 54.00%>>
- ▣ 공수처의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정당했다 <<동의 74.02% 부동의 22.67%>>
- ▣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)를 강화해야 한다 <<동의 73.72% 부동의 23.33%>>
- ▣ 현재를 폐지,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하도록 하자 <<동의 16.48%, 부동의 81.12%>>
- ▣ 헌법재판소 폐지하고 대법원에서 헌법재판 해야 한다 <<예 16.48%, 아니오 81.12%>>

라. 통일·안보 관련

- ▣ 북한의 도발행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<<동의 63.32%, 부동의 33.91%>>
- ▣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에 안보위협 느낀다 <<동의 63.44%, 부동의 34.10%>>
- ▣ 북한 핵에 맞서서 핵무기를 보유(개발)해야 <<찬성 49.25%, 반대 48.23%>>
- ▣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<<동의 48.41%, 부동의 48.77%>>
- ▣ 외국인에 건강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지급 반대한다 <<예 56.83%, 아니오 40.47%>>
- ▣ 외국인의 선거개입 의혹에 공감한다 <<예 42.87%, 아니오 53.70%>>

마. 국회와 정치개혁 관련

- ▣ 국회의원 수당 평균 근로자 임금으로 하자 <<동의 72.82%, 부동의 24.77%>>
- ▣ 입법의 신중을 위한 양원제 도입해야 한다 <<예 44.14%, 아니오 51.41%>>
- ▣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해산권을 도입해야 한다 <<예 42.75%, 아니오 54.18%>>
- ▣ 개헌시 헌법에 5.18을 넣으면 안된다 <<동의 27.00%, 부동의 70.17%>>

바. 선거 및 대통령 선거 관련

- ▣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<<경제 전문성 32.53%, 외교 안보역량 22.37%, 국민과의 소통 18.04%, 청렴 도덕 14.19% 순>>
- ▣ 사전투표에 부정선거 가능 주장 <<가능성 있다 44.98%, 전혀 사실 아니다 47.68%>>
- ▣ 중앙선관위의 선거 관리 <<공정한 선거관리 39.15%, 공정성 의혹 26.46%>>
- ▣ 투표시 후보자 선택의 고려사항 <<정책·공약 42.69%, 인물·능력·도덕성 29.46%, 소속정당 16.60%, 정치경력 4.39%, 주위의 평가 2.41% 순>>

사.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식

- ▣ 결혼은 해야 한다 <<동의 42.69%, 부동의 54.96%>>
- ▣ 자녀는 낳아야 한다 <<동의 34.28%, 부동의 63.50%>>
- ▣ 결혼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다 <<동의 75.29%, 부동의 22.49%>>
- ▣ 정부가 결혼·출산장려에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이 늘 것 <<동의 18.64%, 부동의 79.25%>>
- ▣ 출산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 졌기 때문 <<동의 28.68%, 부동의 68.91%>>

Ⅱ. 주요 응답 분석 |

1. 법 준수 관련 의식

- 1) “우리사회에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업군”에 대한 질문에서 ‘정치인’이라는 응답이 57.43%(955명)로 가장 많았다.

그 다음으로 ‘기업인’이 19.68%, ‘언론인’이라는 응답이 5.53%, ‘법조인’이라는 응답이 5.41%였다. ‘종교인’이라는 응답도 4.09%로 높게 나왔다. 기타의견으로는 ‘연예인’, ‘노동자(민주노총)’라는 응답도 있었고, ‘배달 라이더’라는 응답도 있었다.

« ‘우리 나라에서 법 안 지키는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군’에 대한 인식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공무원	34	2.04%
☐ 2. 교육인	9	0.54%
☐ 3. 기업인	327	19.66%
☐ 4. 법조인	90	5.41%
☐ 5. 언론인	92	5.53%
☐ 6. 의료인	31	1.86%
☐ 7. 정치인	955	57.43%
☐ 8. 종교인	68	4.09%
☐ 9. 기타와 무응답	57	3.43%

- 2) 유권무죄, 무권유죄 현상과 관련하여 “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‘유권무죄 무권유죄’(有權無罪 無權有罪 :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, 힘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쓴다)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?”에 대해 동의한다는 2023년에는 78.90%로, 조사한 이후 처음으로 70%대로 낮아졌으나, 2024년 또 다시 81.80%로 높아졌으며, 올해(2025년)에는 86.77%에 높아졌다. 반면, 부동의한다는 10.70%에 불과했다. (2023년도 78.90%, 2022년도 86.69% 2021년도 86.91%, 2020년도 85.26%로 높게 나온 바 있음)

« ‘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’에 대한 인식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유권무죄무권유죄현상이 있다는데 동의한다.	1443	86.77%
☐ 2. 유권무죄무권유죄현상이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.	178	10.70%
☐ 3. 기타의견 및 무응답	42	2.52%

3) 악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풍조와 관련해 ‘악법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’에 동의한다는 69.93%(2024년도 64.91%, 2023년도 62.73%)로, 부동의한다는 27.90%(2024년도 35.57%, 2023년도 37.15%)보다 높게 나와서 악법이라도 개정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참고로 2021년에는 ‘악법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’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66.35%(2020년도 66.92%)인 반면, 부동의하는 응답은 33.58%(2020년도 32.67%)였다.

« ‘악법이라도 법개정 전까지는 지켜야한다’동의 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(동의한다)	1163	69.93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464	27.90%
☐ 3. 무응답	36	2.16%

4) ‘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할 수 있다’에 대해 동의한다는 41.85%(2024년 45.36%, 2023년도 49.32%, 2022년도 47.84%)가 나와, 지난해보다 낮아졌고 부동의한다는 56.10%(2024년 54.36%, 2023년도 50.51%)였다.

참고로 2021년에는 동의한다는 48.72%(2020년도 44.62%)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50.91%(2020년도 55.11%)였다.

« ‘10억주면 1년 동안 교도소 생활’에의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(동의한다)	696	41.85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933	56.10%
☐ 3. 무응답	34	2.04%

5) 우리나라 법원(사법부)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‘공정한 편이다’는 의견은 32.59%(2024년 28.47%, 2023년 29.62%, 2022년 34.91%), ‘매우 공정하다’는 의견은 2.77%(2024년 3.90%, 2023년 5.59%, 2022년 4.94%)로 나타났다.

‘불공정한 편이다’는 의견은 20.81%(2024년 19.34%, 2023년 16.58%, 2022년 18.33)%, ‘매우 불공정하다’는 의견은 3.61%(2024년 4.14%, 2023년 4.28%, 2022년 2.72%)였다.

전체적으로 10명중에 2명 이상은 사법부(법원)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« 우리나라 ‘법원(사법부)의 공정성’에 대한 인식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매우 공정하다.	46	2.77%
☐ 2. 공정한 편이다.	542	32.59%
☐ 3. 보통이다.	631	37.94%
☐ 4. 불공정한 편이다.	346	20.81%
☐ 5. 매우 불공정하다.	60	3.61%
☐ 6. 기타의견 및 무응답	38	2.18%

2. 현재 진행형 주요 수사와 재판 관련

- 1) “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정당했다”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은 74.02%(1231명)이 답변한 반면, 부동의한다는 의견은 22.67%(377명)이었다.

« ‘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정당했다’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(동의한다)	1231	74.02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377	22.67%
☐ 3. 무응답	55	3.31%

- 2) ‘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재판절차는 공정했다’에 동의한다는 82.50%(1372명)이었으며, 부동의한다는 14.37%(239명)이었다.

« ‘헌법재판소의 탄핵재판절차는 공정했다’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(동의한다)	1372	82.50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239	14.37%
☐ 3. 무응답	52	3.13%

- 3) ‘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결정은 정당했다’에 동의한다는 49.91% (830명)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46.60%(775명)이었다.

« ‘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결정은 정당했다’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(동의한다)	830	49.91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775	46.60%
☐ 3. 무응답	58	3.49%

- 4) ‘이재명 대표의 선거관련 항소심 무죄재판은 공정했다’에 동의한다는

47.87%(796명)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47.75%(794명)로 나와 의견의 엇갈림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.

« '이재명 선거항소심재판 무죄선고의 공정성'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(동의한다)	796	47.87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794	47.75%
☐ 3. 무응답	73	4.39%

3. 검찰개혁, 사법개혁 관련 의식

- 1) '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를 강화해야 한다'에 대해 동의한다는 73.72%(1226명), 부동의한다는 23.33%(388명)이었다.

« '공수처 강화'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(동의한다)	1226	73.72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388	23.33%
☐ 3. 무응답	49	2.95%

- 2) '미국의 여러 주처럼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선제(지역주민의 직접선출)를 도입해야 한다'에 동의한다는 43.96%(731명)이었으며, 부동의한다는 52.86%(879명)이었다.

« '검사장 직선제 도입'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(동의한다)	731	43.96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879	52.86%
☐ 3. 무응답	53	3.19%

- 3) '지방법원장의 직선제(후보장 주민이 직접선출)를 도입해야 한다'에 동의한다는 42.93%(714명)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의견은 54.00%(898명)이었다.

« '지방법원장의 직선제 도입'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(동의한다)	714	42.93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898	54.00%
☐ 3. 무응답	51	3.07%

- 4) '선거재판의 경우 그 법정기한을 지켜야 한다'에 동의한다는 86.65% (1441

명)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의견도 10.82%(180명)로 나왔다. 압도적으로 선거재판의 법정기한 준수를 지지했다.

<< ‘선거재판의 법정기한 준수’에 대한 동의여부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(동의한다)	1441	86.65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180	10.82%
☐ 3. 무응답	42	2.53%

5) ‘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하도록 해야 한다’에 동의한다는 16.48%(274명)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81.12%(1349명)로 나왔다. 부동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.

<< ‘헌법재판소의 폐지와 대법원의 헌법재판’에 대한 동의여부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(동의한다)	274	16.48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1349	81.12%
☐ 3. 무응답	40	2.41%

4. 통일 · 안보 관련 의식

1) 헌법개정시 ‘자유민주주의에서 ‘자유’를 삭제하는 헌법개정은 안 된다’는 의견이 90.14%(2024년도 90.14%, 2023년도 91.57%, 2022년도 92.30%)로 여전히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이었고,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8.00%(2024년도 9.48%, 2023년도 8.35%, 2022년도 7.49%)에 불과하였다.

2021년도에도 ‘자유를 삭제하는 헌법개정(개헌)은 해서는 안 된다’에 동의하는 의견이 90.40%(1237명)으로 ‘부동의한다’는 의견(9.51%)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. 즉, 5년 연속 90%대를 유지하고 있다.

<< ‘자유’ 삭제 헌법 개정에 대한 동의여부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(동의한다)	1499	90.14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133	8.00%
☐ 3. 무응답	31	1.86%

2) ‘개헌시 헌법전문에 광주 5·18을 넣어서는 안된다’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27.00%(449명)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70.17%(1167명)이었다.

« '개헌시 헌법전문에 광주 5·18을 넣어서는 안된다'에 대한 의견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449	27.00%
☐ 2. 아니오(부동의한다)	1167	70.17%
☐ 0. 무응답	47	2.83%

- 3)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 '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 국방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'에 동의한다는 15.27%(2024년도 17.99%, 2023년도 19.29%, 2022년도 21.05%)이고, 부동의한다는 의견은 82.20%(2024년도 81.39%, 2023년도 80.17%, 2022년도 78.69%)로 매우 높게 나와, 청년 대학생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이 여전히 우리 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2021년에는 '주한미군 철수해도 우리 국방은 걱정이 없을 것이다'에 동의하는 의견은 19.09%(2020년도 24.77%)인 반면, 부동의하는 의견이 80.69%(2020년도 74.77%)로 높았다.

« '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 국방에 걱정이 없다'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(동의한다)	254	15.27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1367	82.20%
☐ 3. 무응답	42	2.53%

- 4) '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'에 동의한다는 63.32%(2024년도 68.25%, 2023년도 71.99%)로 높게 나왔으며, 부동의한다는 33.91%(2024년도 31.30%, 2023년도 27.81%)로 청년 대학생들은 강력한 대북 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.

« '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'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(동의한다)	1053	63.32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564	33.91%
☐ 3. 무응답	46	2.77%

- 5) '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에 안보위협을 느낀다'에 동의한다는 63.44%(2024년도 62.91%, 2023년도 59.28%, 2022년도 58.31%)로 높게 나왔다. 반면 34.10%(2024년도 36.64%, 2023년도 40.39%)는 부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.

« '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위협'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1055	63.44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567	34.10%
☐ 3. 무응답	41	2.47%

- 6) ‘북한 핵에 맞서서 핵무기를 보유(개발)하는 것’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49.25%(2024년도 48.05%, 2023년도 49.20%)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48.23%(2024년도 51.36%, 2023년도 47.92%)이었다.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핵무기 보유 내지 개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평가됐다.

« ‘북한 핵에 맞선 핵 개발(보유)에 대한 의견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찬성한다)	819	49.25%
☐ 2. 아니오(반대한다)	802	48.23%
☐ 0. 무응답	42	2.53%

- 7) ‘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’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48.41%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48.77%였다.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청년 대학생들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.

« ‘북한도발을 막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’에 대한 의견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805	48.41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811	48.77%
☐ 0. 무응답	47	2.83%

5. 외국인 처우 관련 의식

- 1) ‘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투표권은 상호주의(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투표권이 인정되는 경우만)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’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77.93%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19.54%였다.

« ‘외국인 투표권 행사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한’에 대한 의견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찬성한다)	1296	77.93%
☐ 2. 아니오(반대한다)	325	19.54%
☐ 0. 무응답	42	2.53%

2) ‘외국인들(그 부양가족)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주는 것에 반대한다’에 동의한다는 56.83%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40.47%였다.

« ‘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등 적용에 반대’에 대한 의견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945	56.83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673	40.47%
☐ 0. 무응답	45	2.71%

3) ‘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간첩죄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’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79.92%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17.56%였다.

« ‘외국인을 간첩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’에 대한 의견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1329	79.92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292	17.56%
☐ 0. 무응답	42	2.53%

4) ‘중국인 등 외국인의 각종 선거개입 의혹에 공감한다’에 동의한다는 42.87%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53.70%였다.

« ‘외국인의 각종 선거개입 의혹’에 공감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713	42.87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893	53.70%
☐ 0. 무응답	57	3.43%

6. 국회와 정치개혁에 대한 인식

1) ‘다수당이 단독 입법을 하는 것’에 대해서는 ‘바람직하지 않다’는 의견이 49.43%(2024년도 50.33%, 2023년도 같은 취지 설문에 대해 51.91%)로 많았으며, ‘매우 바람직하지 않다’는 의견은 29.22%(2024년도 16.72%, 2023년도 20.65%)로 나타나, 법안처리가 가능한 ‘다수당’이라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.

반면, ‘매우 바람직하다’는 의견은 1.80%(2024년도 4.52%, 2023년 4.28%), ‘바람직하다’는 의견은 13.23%(2024년도 23.75%, 2023년도 18.35%)에 불과했다.

<< 다수당의 '단독 법안 처리'에 대한 의견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매우 바람직하다.	30	1.80%
☐ 2. 바람직하다.	220	13.23%
☐ 3. 바람직하지 않다.	822	49.43%
☐ 4.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.	486	29.22%
☐ 5. 기타의견 및 무응답	105	6.32%

- 2) '정치에 대한 관심도'에 관한 설문에서 '매우 관심이 많다'는 의견은 9.14% (2024년도 9.86%), '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'는 응답은 51.11%(2024년도 44.19%)로, 과반 이상인 60.25%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.

반면, '별로 관심이 없다'는 응답은 31.81%(2024년도 37.99%), '전혀 관심이 없다'는 의견은 5.47%(2024년도 7.45%)였다.

<<'정치에 대한 관심도'에 대한 의견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매우 관심이 많다.	152	9.14%
☐ 2.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.	850	51.11%
☐ 3. 별로 관심이 없다.	529	31.81%
☐ 4. 전혀 관심이 없다.	91	5.47%
☐ 5. 기타의견 및 무응답	41	2.46%

- 3) '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는지'에 대한 설문에서 보수적 이라는 응답이 41.73%, 진보적 이라는 응답이 45.04%였다.

기타 응답으로는 '진보, 보수 둘 다 아니다', '중도(중립)'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, '상황에 따라 다르다'는 응답이라는 응답 등도 있었다.

<< '정치 이념적 성향'에 대한 의견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보수적	138	8.30%
☐ 2. 다소 보수적	556	33.43%
☐ 3. 다소 진보적	601	36.14%
☐ 4. 진보적	148	8.90%
☐ 5. 기타의견 및 응답	220	13.23%

- 4) '입법의 신중을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'에 동의한다는 44.14%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51.41%였다.

<< '양원제 도입'에 대한 의견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734	44.14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855	51.41%
☐ 0. 무응답	74	4.45%

- 5) '국회 견제를 위한 국회 해산권을 도입해야 한다'에 동의한다는 42.75%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54.18%였다.

<< '국회 해산권 도입'에 대한 의견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711	42.75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901	54.18%
☐ 0. 무응답	51	3.07%

- 6) 논란이 되고 있는 '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'에 동의한다는 62.12%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35.06%였다.

<< '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'에 대한 의견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1033	62.12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583	35.06%
☐ 0. 무응답	47	2.83%

- 7) '국회의원의 수당을 근로자 평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'에 동의한다는 72.82%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24.77%였다.

<< '국회의원 수당을 평균 근로자 수준으로 조정'에 대한 의견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1211	72.82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412	24.77%
☐ 0. 무응답	40	2.41%

- 8) '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결정이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'에 동의한다는 31.81%이었고, 부동의한다는 65.36%였다.

<< '대통령 탄핵결정을 국민투표로 결정'에 대한 의견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529	31.81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1087	65.36%
☐ 0. 무응답	47	2.83%

7. 정치, 선거 및 유권자 선택과 관련 인식

- 1) ‘언론사나 조사기관의 선거나 정치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정도’와 관련해서 ‘매우 신뢰한다’는 3.61%, ‘대체로 신뢰한다’는 33.79%인 반면, ‘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’는 47.14%로 나왔다. ‘전혀 신뢰하지 않는다’는 12.6%로 나와, 선거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왔다.

<< ‘선거관련 여론조사의 신뢰성’에 대한 의견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매우 신뢰한다.	60	3.61%
☐ 2. 대체로 신뢰한다.	562	33.79%
☐ 3.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.	784	47.14%
☐ 4.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.	211	12.69%
☐ 5. 기타의견과 무응답	46	2.76%

- 2) ‘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’에 대한 설문에서 ‘경제 전문성’이라는 응답이 32.53%로 가장 높게 나왔다. ‘외교·안보 역량’이라는 응답이 22.37%, ‘국민과의 소통능력’ 응답이 18.04%, ‘청렴성과 도덕성’이 14.49%이었고, ‘강력한 개혁의지’는 8.90%였다.

<< ‘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’에 대한 의견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경제 전문성	541	32.53%
☐ 2. 외교·안보 역량	372	22.37%
☐ 3. 국민과의 소통 능력	300	18.04%
☐ 4. 강력한 개혁 의지	148	8.90%
☐ 5. 청렴성과 도덕성	241	14.49%
☐ 6. 기타의견과 무응답	61	3.67%

- 3) 선거 내지 투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는

- 3-1) ‘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’에 대해 동의한다는 82.56%(2024년도 79.35%), 부동의한다는 15.39%(2024년도 20.27%)로 다수가 자신의 선택이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< 내 한 표는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’에 대한 동의여부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1373	82.56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256	15.39%
☐ 0. 무응답	34	2.04%

3-2) ‘선거를 통해 국가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’는 의견에 대해 92.30%(2024년도 86.56%)가 동의한다는 입장이었고, 부동의를 5.53%(2024년도 13.13%)에 불과했다.

« ‘선거를 통해 국가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’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1535	92.30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92	5.53%
☐ 0. 무응답	36	2.16%

3-3) ‘선거를 통해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’는 의견에 대해서는 85.03%(2024년도 75.84%)가 동의하는 입장이었고, 12.87%(2024년도 23.78%)는 부동의를 하는 입장이었다.

« ‘선거로 나의 일상 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’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1414	85.03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214	12.87%
☐ 0. 무응답	35	2.10%

3-4) ‘이번 6.3 선거는 체제전쟁(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반자유민주주의 진영간의 경쟁)이 될 것이다’는 의견에 대해서는 50.75%가 동의하는 입장이었고, 46.00%는 부동의를 하는 입장이었다.

« ‘이번 선거는 체제전쟁이 될 것이다’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844	50.75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765	46.00%
☐ 0. 무응답	54	3.25%

4) ‘후보자 선택의 기준’과 관련해서는 ‘정책·공약’이라는 응답이 42.69%(2024년도 36.44%)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, ‘후보자 개인의 인물·능력·도덕성’ 등에 대해서는 29.46%(2024년도 19.96%)이었고, 후보자의 소속정당이라는 응답은 16.60%(2024년도 30.51%)이었다.

이외에 ‘정치경력’이 4.39%(2024년도 4.10)%, ‘주위의 평가’가 2.41%였다. 개인적 연고, 학연·지연 등은 0.42%에 불과했다.

<< '후보자 선택의 기준'에 대한 의견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정책·공약	710	42.69%
☐ 2. 소속 정당	276	16.60%
☐ 3. 인물·능력·도덕성	490	29.46%
☐ 4. 출신 지역	7	0.42%
☐ 5. 정치경력	73	4.39%
☐ 6. 개인적 연고, 학연·지연 등	7	0.42%
☐ 7. 주위의 평가	40	2.41%
☐ 8. 기타의견 및 무응답	60	3.71%

- 5) '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인가'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'반드시 투표할 것이다'는 응답이 65.90%로 가장 많이 나왔다. 그 다음으로 '되도록 투표할 것이다'는 응답이 27.60%여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투표의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.

<< '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의사'에 대한 의견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.	1096	65.90%
☐ 2. 되도록 투표할 생각이다.	459	27.60%
☐ 3. 투표할 생각이 없다.	60	3.61%
☐ 4. 투표할 생각이 전혀 없다.	8	0.48%
☐ 5. 기타의견과 무응답	40	2.40%

- 6) '사전투표 등에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'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'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'는 44.98%이었고, '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'는 47.68%로 반반이었다.

<< '사전투표 등에서 부정선거 가능하다는 주장'에 대한 의견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.	748	44.98%
☐ 2.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.	793	47.68%
☐ 3. 기타의견과 무응답	122	7.34%

- 7) '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'와 관련해서는 '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'는 응답이 39.15%이었고, '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의혹이 있다'는 응답이 26.46%로 나왔다.

<< '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'에 대한 의견 >>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.	651	39.15%
☐ 2.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의혹이 있다.	440	26.46%
☐ 3. 모르겠다.	526	31.63%
☐ 4. 기타의견과 무응답	46	2.76%

8.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식

- 1)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‘결혼은 해야 한다’에 동의한다는 42.69%(2024년도 42.47%, 2023년도 40.64%)로 10명 중에 4명에 불과했다. 부동의한다는 의견은 54.96%(2024년도 57.19%, 2023년도 59.07%)로 많았다.

« ‘결혼은 해야 한다’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710	42.69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914	54.96%
☐ 0. 무응답	39	2.35%

- 2) ‘자녀는 낳아야 한다’에 대해 동의한다는 34.28%(2024년도 34.78%, 2023년도 28.47%)로 10명 중에 3명에 불과했고, 부동의한다는 63.50%(2024년도 65.01%, 2023년도 71.25%)로 나타나 대한민국 소멸론, 인구절벽의 문제가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냈다.

« ‘자녀는 낳아야 한다’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570	34.28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1056	63.50%
☐ 0. 무응답	37	2.22%

- 3) ‘결혼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다’는 것에 대해서는 75.29%(2024년도 77.97%, 2023년도 81.74%)가 동의한다고 하여, 경제적 독립을 결혼의 선결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. 부동의한다는 22.49%(2024년도 21.61%, 2023년도 17.98%)에 불과했다.

« ‘결혼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수다’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1252	75.29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374	22.49%
☐ 0. 무응답	37	2.22%

- 4) ‘정부가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이 늘 것이다’에 대해 동의한다는 18.64%(2024년도 22.37%, 2023년도 32.50%)로 나타나,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결혼 및 출산율 저조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 부동의한다는 79.25%(2024년도 77.46%, 2023년도 67.26%)였다.

« ‘정부가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은 늘 것이다’에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310	18.64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1318	79.25%
☐ 0. 무응답	35	2.10%

- 5) ‘출산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 졌기 때문이다’에 대해 동의한다는 28.68%(477명 / 2024년도 32.71%, 949명)였고, 부동의한다는 68.91%(1146명 / 2024년도 67.08%, 1946명)였다. 여성의 사회활동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냈다.

« 출산저조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에 대한 동의여부 »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 (동의한다)	477	28.68%
☐ 2. 아니오(동의하지 않는다)	1146	68.91%
☐ 0. 무응답	40	2.41%

Ⅲ. 항목별 응답 현황 |

I. 법과 사법 현안에 대한 인식

01. 귀하는 '우리 사회에서 법을 안 지키는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직업군은 무엇입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공무원	34	2.04%
☐ 2. 교육인	9	0.54%
☐ 3. 기업인	327	19.66%
☐ 4. 법조인	90	5.41%
☐ 5. 언론인	92	5.53%
☐ 6. 의료인	31	1.86%
☐ 7. 정치인	955	57.43%
☐ 8. 종교인	68	4.09%
☐ 9. 기타와 무응답	57	3.43%
계	1663	100%

02. 귀하는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'유권무죄 무권유죄'(有權無罪 無權有罪 :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, 힘없는 사람들은 죄를 뒤집어 쓴다)라는 말에 대해 동의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'유권무죄무권유죄'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.	1443	86.77%
☐ 2. '유권무죄무권유죄'현상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.	178	10.70%
☐ 3. 기타의견 및 무응답	42	2.52%
계	1663	100.00%

03.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(동의하시면 예, 동의하지 않으면, 아니오에 응답바람.)

1) '자유'를 삭제하는 헌법개정(개헌)을 해서는 안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(자유삭제 헌법개정 불가)	1499	90.14%
☐ 2. 아니오(자유삭제 헌법개정 가능)	133	8.00%
☐ 0. 무응답	31	1.86%
계	1663	100.00%

2) 개헌시 헌법 전문에 광주 5·18을 넣어서는 안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(5.18을 넣어서는 안된다)	449	27.00%
☐ 2. 아니오(5.18을 넣어도 된다)	1167	70.17%
☐ 0. 무응답	47	2.83%
계	1663	100.00%

3) 악법이라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1163	69.93%
☐ 2. 아니오	464	27.90%
☐ 0. 무응답	36	2.16%
계	1663	100.00%

4)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교도소생활을 할 수 있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696	41.85%
☐ 2. 아니오	933	56.10%
☐ 0. 무응답	34	2.04%
계	1663	100.00%

04. 귀하는 법원(사법부)의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매우 공정하다.	46	2.77%
☐ 2. 공정한 편이다.	542	32.59%
☐ 3. 보통이다.	631	37.94%
☐ 4. 불공정한편이다.	346	20.81%
☐ 5. 매우불공정하다.	60	3.61%
☐ 6. 기타의견과 무응답	38	2.18%
계	1663	100.00%

05. 귀하는 수사와 재판, 헌법재판 관련해 다음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
(동의하시면 예, 동의하지 않으면, 아니오에 응답바람.)

1)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현직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정당했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1231	74.02%
☐ 2. 아니오	377	22.67%
☐ 0. 무응답	55	3.31%
계	1663	100.00%

2)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재판절차는 공정했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1372	82.50%
☐ 2. 아니오	239	14.37%
☐ 0. 무응답	52	3.13%
계	1663	100.00%

3)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결정은 정당했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830	49.91%
☐ 2. 아니오	775	46.60%
☐ 0. 무응답	58	3.49%
계	1663	100.00%

4) 이재명 대표의 선거 항소심 무죄재판은 공정했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796	47.87%
☐ 2. 아니오	794	47.75%
☐ 0. 무응답	73	4.39%
계	1663	100.00%

06. 귀하는 검찰개혁, 사법개혁 관련해 다음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
(동의하시면 예, 동의하지 않으면, 아니오에 응답바람.)

1)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를 강화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1226	73.72%
☐ 2. 아니오	388	23.33%
☐ 0. 무응답	49	2.95%
계	1663	100.00%

2) 미국 여러 주처럼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직선제(지역주민의 직접 선출)를 도입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731	43.96%
☐ 2. 아니오	879	52.86%
☐ 0. 무응답	53	3.19%
계	1663	100.00%

3) 지방법원장의 직선제(후보 중 주민이 직접 선출)를 도입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714	42.93%
☐ 2. 아니오	898	54.00%
☐ 0. 무응답	51	3.07%
계	1663	100.00%

4) 선거재판의 경우에는 그 법정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1441	86.65%
☐ 2. 아니오	180	10.82%
☐ 0. 무응답	42	2.53%
계	1663	100.00%

5)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을 하도록 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274	16.48%
☐ 2. 아니오	1349	81.12%
☐ 0. 무응답	40	2.41%
계	1663	100.00%

II. 대북정책과 외국인 현안에 대한 인식

07. 귀하는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동의하시면 예, 동의하지 않으면 아니오에 응답>

1)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1053	63.32%
☐ 2. 아니오	564	33.91%
☐ 0. 무응답	46	2.77%
계	1663	100.00%

2)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에 안보위험을 느낀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1055	63.44%
☐ 2. 아니오	567	34.10%
☐ 0. 무응답	41	2.47%
계	1663	100.00%

3)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 국방은 걱정없을 것이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254	15.27%
☐ 2. 아니오	1367	82.20%
☐ 0. 무응답	42	2.53%
계	1663	100.00%

4) 북한 핵에 맞서서 핵무기를 보유(개발)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819	49.25%
☐ 2. 아니오	802	48.23%
☐ 0. 무응답	42	2.53%
계	1663	100.00%

5) 북한의 도발을 막기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805	48.41%
☐ 2. 아니오	811	48.77%
☐ 0. 무응답	47	2.83%
계	1663	100.00%

08. 귀하는 외국인, 특히 중국인 관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(동의하시면 예, 동의하지 않으면, 아니오에 응답바람.

1) 지방선거에서 외국인의 투표권은 상호주의(외국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투표권이 인정되는 경우만)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1296	77.93%
☐ 2. 아니오	325	19.54%
☐ 0. 무응답	42	2.53%
계	1663	100.00%

2) 외국인들(그 부양가족)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실업급여 주는 것에 반대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945	56.83%
☐ 2. 아니오	673	40.47%
☐ 0. 무응답	45	2.71%
계	1663	100.00%

3)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간첩죄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1329	79.92%
☐ 2. 아니오	292	17.56%
☐ 0. 무응답	42	2.53%
계	1663	100.00%

4) 중국인 등 외국인의 각종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공감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713	42.87%
☐ 2. 아니오	893	53.70%
☐ 0. 무응답	57	3.43%
계	1663	100.00%

Ⅲ. 국회와 정치개혁에 대한 인식

09. 귀하는 다수당이 단독 입법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매우 바람직하다.	30	1.80%
☐ 2. 바람직하다.	220	13.23%
☐ 3. 바람직하지 않다.	822	49.43%
☐ 4.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.	486	29.22%
☐ 5. 기타의견과 무응답	105	6.32%
계	1663	100.00%

10. 귀하는 정치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매우 관심이 많다.	152	9.14%
☐ 2.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.	850	51.11%
☐ 3. 별로 관심이 없다.	529	31.81%
☐ 4. 전혀 관심이 없다.	91	5.47%
☐ 5. 기타의견과 무응답	41	2.46%
계	1663	100.00%

11. 귀하는 귀하의 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보수적	138	8.30%
☐ 2. 다소 보수적	556	33.43%
☐ 3. 다소 진보적	601	36.14%
☐ 4. 진보적	148	8.90%
☐ 5. 기타의견과 무응답	220	13.23%
계	1663	100.00%

12. 귀하는 국회 및 정치사회개혁 관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(동의하시면 예, 동의하지 않으면, 아니오에 응답바람.

1) 입법의 신중을 위해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734	44.14%
☐ 2. 아니오	855	51.41%
☐ 0. 무응답	74	4.45%
계	1663	100.00%

2)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해산권을 도입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711	42.75%
☐ 2. 아니오	901	54.18%
☐ 0. 무응답	51	3.07%
계	1663	100.00%

3)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1033	62.12%
☐ 2. 아니오	583	35.06%
☐ 0. 무응답	47	2.83%
계	1663	100.00%

4) 국회의원의 수당을 근로자 평균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1211	72.82%
☐ 2. 아니오	412	24.77%
☐ 0. 무응답	40	2.41%
계	1663	100.00%

5)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529	31.81%
☐ 2. 아니오	1087	65.36%
☐ 0. 무응답	47	2.83%
계	1663	100.00%

IV. 선거와 투표 등에 대한 인식

13. 귀하는 언론사나 조사기관의 선거나 정치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매우 신뢰한다.	60	3.61%
☐ 2. 대체로 신뢰한다.	562	33.79%
☐ 3. 대체로 신뢰하지 않는다.	784	47.14%
☐ 4.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.	211	12.69%
☐ 5. 기타의견과 무응답	46	2.76%
계	1663	100.00%

14. 귀하는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경제 전문성	541	32.53%
☐ 2. 외교·안보 역량	372	22.37%
☐ 3. 국민과의 소통 능력	300	18.04%
☐ 4. 강력한 개혁 의지	148	8.90%
☐ 5. 청렴성과 도덕성	241	14.49%
☐ 6. 기타의견과 무응답	61	3.67%
계	1663	100.00%

15. 귀하는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(동의하시면 예, 동의하지 않으면, 아니오에 응답바람.)

1)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1373	82.56%
☐ 2. 아니오	256	15.39%
☐ 0. 무응답	34	2.04%
계	1663	100.00%

2) 선거로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1535	92.30%
☐ 2. 아니오	92	5.53%
☐ 0. 무응답	36	2.16%
계	1663	100.00%

3) 선거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1414	85.03%
☐ 2. 아니오	214	12.87%
☐ 0. 무응답	35	2.10%
계	1663	100.00%

4) 이번 6.3선거는 체제전쟁(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반자유민주주의 진영 간의 경쟁)이 될 것이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844	50.75%
☐ 2. 아니오	765	46.00%
☐ 0. 무응답	54	3.25%
계	1663	100.00%

16. 귀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실 것입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.	1096	65.90%
☐ 2. 되도록 투표할 생각이다.	459	27.60%
☐ 3. 투표할 생각이 없다.	60	3.61%
☐ 4. 투표할 생각이 전혀 없다.	8	0.48%
☐ 5. 기타의견과 무응답	40	2.40%
계	1663	100.00%

17. 귀하는 사전투표 등에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.	748	44.98%
☐ 2.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.	793	47.68%
☐ 3. 기타의견과 무응답	122	7.34%
계	1663	100.00%

18. 귀하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다.	651	39.15%
☐ 2.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의혹이 있다.	440	26.46%
☐ 3. 모르겠다.	526	31.63%
☐ 4. 기타의견과 무응답	46	2.76%
계	1663	100.00%

19. 귀하는 투표할 때 주로 후보자의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여 투표하십니까?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정책·공약	710	42.69%
☐ 2. 소속 정당	276	16.60%
☐ 3. 인물·능력·도덕성	490	29.46%
☐ 4. 출신 지역	7	0.42%
☐ 5. 정치경력	73	4.39%
☐ 6. 개인적 연고, 학연·지연 등	7	0.42%
☐ 7. 주위의 평가	40	2.41%
☐ 8. 기타의견과 무응답	60	3.71%
계	1663	100.00%

V. 가정의 달 결혼·출산에 대한 인식

20. 귀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(동의하시면 예, 동의하지 않으면, 아니오에 응답바람.)

1) 결혼은 해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710	42.69%
☐ 2. 아니오	914	54.96%
☐ 0. 무응답	39	2.35%
계	1663	100.00%

2) 자녀는 낳아야 한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570	34.28%
☐ 2. 아니오	1056	63.50%
☐ 0. 무응답	37	2.22%
계	1663	100.00%

3) 결혼을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요하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1252	75.29%
☐ 2. 아니오	374	22.49%
☐ 0. 무응답	37	2.22%
계	1663	100.00%

4) 정부가 예산만 많이 지원하면 결혼과 출산이 늘 것이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310	18.64%
☐ 2. 아니오	1318	79.25%
☐ 0. 무응답	35	2.10%
계	1663	100.00%

5) 출산이 저조한 이유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많아진 때문이다.

응답항목	응답인원(명)	응답률(%)
☐ 1. 예	477	28.68%
☐ 2. 아니오	1146	68.91%
☐ 0. 무응답	40	2.41%
계	1663	100.00%

<끝>